

전주시 부실채권 없애 서민 빚해소

금융복지 상담소·시민강좌 무료 운영 등 통해

전주시가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던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함으로써 시민들을 빚더미에서 구해냈다.

시는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빚 문제로 야기되는 가정파탄과 사회생활 포기, 근로의욕 상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한해 금융복지상담소 운영과 금융복지 시민강좌와 무료 운영 등 다양한 서민금융복지 정책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시는 22일 시청 로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종일 주빌리은행 대표, 최임근 전주지속교연합회장, 백종일 전

북은행 부행장,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채권 소각식'을 갖고, 총 2억5000만원(이자포함 8억4600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이날 소각된 8억4600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은 전주시가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 종교단체가 후원한 1000만원의 기금으로 매입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5년 이상된 장기 부실채권을 저가로 매입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시켜 자활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주시민 46명이 빚의 굴레와 악성 채권추심으로부터 해방됐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0일 지역 내 4대 종교단체(전주시기독교연합회, 천주교 전주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포교당 전북불교회관, 원불교 전북(전주)교구)과 전북은행, 전주시민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전수형 주빌리은행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노력의 첫 결실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전주시 교회들이 1000만원의 기금을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면서, 이번 부실채권소각 사업이 가능해졌다.

부실채권 매입 소각 행사 등 전수형 서민금융복지 정책을 통해 빚을 갚을 의사가 있음에도 신용불량자가 돼버려 빚을 상환할 수 없거나, 늘어남 이

자로 인해 빚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며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신용회복 지원, 금융복지 상담, 금융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0월 본격 개소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지난 14일 전주시청 민원실로 사무실을 이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소는 불법대부업을 감시하고, 기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사업 등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너물수수 전 부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3년

김호수 - 징역 3년 벌금6000만원

이한수 - 징역10개월 집유 2년

임정엽 - 벌금 80만원 유지

22일 열린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3명의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6,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의 죄명으로 기소된 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브로커로부터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25억원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35억원 규모로 확대 진행해 현세를 낭비한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같은 날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모 일간지 기자 2명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자를 이용해 여행경비 500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됐다.

그는 지난 6기 민선 익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항소심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 무주군청 내 사무실 10곳을 방화해 명함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군수는 벌금형으로 그칠 시행해 현세를 낭비한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인권보장 착수 보고회 가져

공감대 확산 방안 비전과 추진목표 등

전주시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22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전주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운영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주시 인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미옥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6개월 동안 진행한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인권 및 인권도시의 국내·외 동향, 제도 및 이슈 분석 △주요 지수별 전주시 인권현황 파악 및 인권실태(인권의식) 조사 △인권교육 도입·운영 등 인권에 관한 공감대 확산 방안 △인권정책 추진사례 조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행정적 인권조사 매뉴얼(로드맵) 수립, △인권정책의 비전과 추진목표, 추진과제 등이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인권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향후 5



전주시는 22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전주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운영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주시 인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미옥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6개월 동안 진행한다.

개년(2017~2021년)동안 추진할 전주시의 인권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인권정책은 확대하는 등 정책우선 순위에 따라 분야별 중점 및 세부실천과제를 발굴, 지속가능한 전주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서 시는 올해 시정의 핵심가치인 '사람'에 대한 참된 인

권실현과 보장을 위해 인권행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권전담부서인 인권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에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 및 공감대를 형성,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주력했다. /김영재 기자

/김영재 기자

아내 폭행한 전북경찰청 경찰관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운현 판사는 22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김모(51) 경위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김 경위는 지난 7월 17일 오후6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내의 손을 비틀고 머리와 옷깃을 잡고 흔들며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A차단방역 철새도래지 집중 소독

전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활동에 나섰다.

전주시는 최근 전남과 충남, 충북, 경기, 세종·도내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AI의 주원인으로 추정되는 철새도래지의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2일 전주지역 철새도래지인 덕진구 화전동 일대의 만경강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 축협 공동방제단의 소독차량을 활용한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상황 보고회

전주시는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안전도시위원들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국제안전도시시는 '사고와 손상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날 보고회는 국제안전도시 안전 관련 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장 업무능력 향상 및 상호협력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31개 부서·기관에서 추진 중인 교통과 자살, 재난, 범죄, 학교어린이안전 6개 분야 94개 안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안전증진방안 및 손상 예방전략 등을 마련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안전증진사업을 체계화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 말을 목표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 지역공동체가 협력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계획이다.

시민안전담당관실 관계자는 "안전도시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과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살기 좋은 전주시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뒷돈 받은 김제서 지능범죄수사팀 전 팀장 파면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516만원의 뒷돈을 받은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전 팀장 김모 경위를 파면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 까지 사건 진정인 조모씨(46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516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된 이후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파면됐다.

김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16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청탁의무를 저버렸고, 범죄 이후에도 재보자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뇌우치고 향응과 접대받은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